

부고

▲이광재(전 도지사) 씨 장인(이진규씨)상= 29일 밤 9시 별세. △말인=31일 오전 △장지=경남 산청군 신영 △빈소=부산진구 범선동 부산시민 장례식장 △연락처=(051)636-4444.
▲정태일(강원플라 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 장인(이성진씨)상=29일 새벽 1시 별세. △말인=31일 오전 9시 △장지=경기 양평 하늘숲 △빈소=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연락처=010-8987-8054

대형건설사 불공정 계약에 하도급업체 고통

대형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여전히 계속되는 등 대형건설사의 갑질에 따라 지역 내 하도급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 도내 A업체는 최근 두 개의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 조항을 강요받았다.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가 처리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의 관련 작업은 현장지시에 따라 시공, 현장지시 불응 시 작업 중단 또는 부이의 감소 등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중소업체 공사수주 위해 부당특약 수용-이윤 감소 경영난 조려 지역 업체 "처벌 강화" 호소-대형사 측 "공정위 지시 따를 것"

조건들이 많았다. 또 공사 하자는 100% 하도급업체가 담당, 자금지체 및 장비 임대료지체 물품 사용 등도 하도급업체에는 짐이 되는 조항이다. A업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부당특약 약임을 알면서도 공사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

나 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체결된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부당특약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재받을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과 함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분 강도가 낮은 데다 과징금·벌금보다 특수조건 설

정으로 인한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대형건설사의 부당특약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측은 "하도급법 내 부당특약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도급에서 특약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9기자

국회-도정 '소통·협치'로 산적한 현안 뚫는다

오늘 20대 국회 개원

30일 일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가 강원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 국회의원들과 최문순 도정과의 '협치(協治)'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쟁점이 쏠려 있는 도 속원사업 해결을 위한 여야를 떠나 도 국회 의원 8명과 강원도정 간 소통이 중요하다. 나아가 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과들의 연대 강화도 필요하다.

지난 4·13 총선에서 3선 중진 2명,

3선 2명·재선 3명 대거 배출 초선 의원들도 인맥 폭 넓어

도 연고 의원들도 여야 중추 연대 강화해야 지역발전 견인

재선 3명 등 새누리당 소속 다선의원이 대거 배출되면서 도 현안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선 권성동(강릉) 의원은 개인 전부터 임법 권력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 '0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김진태 의원 ◇김가진 의원 ◇송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이강수 의원 ◇염동열 의원 ◇황명철 의원

의원도 당내 비박계 중진 의원으로 자리를 잡는 등 당내의 영향력이 커졌다. 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김진태(춘천)-김기진(원주갑)-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 재선 의원들도 국회 상임위 내 여야간 실질적 소통 중구 역할을

담당하는 간사 물결에 오르고 있다. 당내 원내부대표를 맡게 된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을) 의원은 같은당 소속 최문순 지사의 '원내 핫라인'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역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진박진(박근혜)계 새누리당 이강수(속초-고성-양양) 의원과 경기경찰청장 및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무소속 이철규(동해-삼척) 의원 등의 폭넓은 인맥은 도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 연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철원 출신 이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 연고 국회의원들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

에 포진돼 있어 어느 때보다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마련됐다. 내년 12월 치러질 대선도 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권성동 의원은 "도 출신 모든 국회의원이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하나가 돼 도 정치력을 중앙정치권에서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의 황성 출신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도 발전의 전기가 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각종 도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홍원표기자 hphong@

철도·올림픽·케이블카... 국비 확보 관건

■현안과 입법 과제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서 여·야간 원구성이 완료되면 강원도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도 출신 및 출향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도 현안과 입법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최대 현안은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비 지원 등이다.

동서고속철도는 지난 19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원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 정치권은 이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 중이다.

또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사후관리 국가지원과 문화올림픽 국비 특별지원 등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공약 서울~속초 동서고속철 해결 우선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군시설보호구역 축소 필요

사후활동 대상 경기장은 신설 6개, 보완 6개 등 12개로, 이 중 10개를 제외한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2곳은 관리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슬라이딩 센터 등 일부 경기장은 전문 체육시설로서 사후 활용에 한계가 있고, 관리비가 많아 지방비만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올림픽 국비 특별지원도 과제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비 20억원의 조기 확정과 내년 3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통선(5km 이내) 및 보호제한구역(15km 이내)의 일률적 축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정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을 기대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국비 확보도 관건이다.

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국비 230억원

지원을 요청 중이다.

입법과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계류됐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등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강원도 현안 중 하나인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국가 지원과도 직결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관련법의 제정도 현안이다.

이 법은 개성공단의 역기능으로 남측에 공단을 조성하고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진민수 jinminso@kado.net

도내 대형공사로 건설업계 '단비'

원주~강릉 역사 624억원 최대규모 지역의무공동도급 도내업체 참여 ↑

강원도내 대규모 공사 개찰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어 강원건설 회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624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신규 역사 건립공사 시공사가 선정됐다.

최근 진행된 개찰에서 평창역사(193억원)는 서울 남광토건, 진부역사(161억원)는 춘천 구국건설, 횡성역사(137억원)는 경남 한림건설, 둔

내역사(133억원)는 경기 한동건설이 1순위로 선정됐다.

4건 모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시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높였다. 신규 역사 4곳 모두 내달 착공된다.

두 차례 유찰된 강원대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재공공됐다.

공사 기간은 종전보다 2개월 늘어난 20개월이다. 공사비는 324억원 규

모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FQ) 서류 제출은 내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춘천시도 공사 추정금액 549억122만원 규모의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춘천시청사 건립공사는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규정이 적용되는 도내 첫 공사다. 개찰은 내달 10일이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단비 같은 대형공사 시행사들이 잇따라 선정되고 있다"며 "동계 특수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간간히 대형공사 입찰이 진행돼 도내 건설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논란

16조원 공사 직불제 적용 건설단체 방침 철회 요구

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도내 건설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대금지불 근절을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자자체 등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중 90% 이상을 하도급 지급이 등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해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단체들은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건설사 유동성 제약 △중복 규제 △체불방지제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제도로 보완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지

급 시스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인출제한 제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인출제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자신의 공사대금 이외에 자금에는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건설단체들은 "인출제한은 건설업체들의 자금운용을 떨어뜨려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2차 최고 경쟁률 19:1

원주 단계동 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봉화산 벨라시티 2차'가 1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했다.

2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벨라시티2차 최종 청약 결과, 8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51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2순위 마감 경쟁률은 2.42대 1로 집계됐다.

10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이 1

순위에 마감됐으며, 7개 주택형의 경우도 지역 내 청약자가 몰렸다.

특히 전용 150B㎡타입이 최고 경쟁률인 19대 1을, 전용59B㎡타입도 5.44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당첨자는 6월 2일에 발표되며 같은달 7일부터 9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한편 '봉화산 벨라시티 2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273가구 △전용면적 74㎡ 143가구 △전용면적 84㎡ 419가구 △전용면적 150㎡ 47가구 등 총 839가구 규모다. 원주/윤수용

‘형평성 논란’ 조달청 중심제 입찰자격

배치기술자에 부공종 경력도 인정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배치기술자 심사 기준에서 복합공사 부공종에 참여한 기술자의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공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들이 지난달 입찰공고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당초 중심제 발주공사에서 배치기술자를 심사할 때 배치예정 기술자가 복합업종 공사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공종에 참여한 기술자만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공종 참여 기술자도 경력을 인정해 현장대리인 자격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런 기준에 대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공종 참여 기술자 경력 불인

업계 반발에 당초 기준 철회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적용

정 논란의 시작은 이렇다.

예를 들어 A건설현장이 토목공사(주공종)와 조경공사(분담 또는 부공종)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경우, 주공종인 토목공사에 참여한 토목기술자만 경력을 인정해주고, 부공종인 조경공사에 조경기술자로 참여한 기술자는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심제 대상 해당 공종공사에 현장대리인 자격을 못 얻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이 이런 방식의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을 지속할 경우 중심제 대상 공사에서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고도 입찰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배치기술자 경력인정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해당 경력기술자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인정 안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지속되면 소수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경력 기술자 인력난 우려도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술인협회에서는 부공종 이더라도 조경공사에 조경기술자로 참여한 기술자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한상준기자 newspia@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형평성 논란' 조달청 중심제 입찰자격, 배치기술자에 부공종 경력도 인정

하지만 조달청은 기술인협회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부공종인 경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방침은 복합공사에서 부공종으로 소방공사에 참여한 소방공사 기술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LH와 철도시설공단 등 중심제 발주 기관들은 주공종, 부공종을 가리지 않고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건설현장에서 해당 공종에서 기술자로 참여해 일했고, 정부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위탁사

업 기관인 기술인협회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부공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장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조경, 소방분야 경력 기술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될 가능성이 컸다. 조경, 소방분야가 주공종으로 나오는 공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경력기술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경력기술자를 보유한 일부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게 될 우려도 나왔다.

이런 문제는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발주로 인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조달청이 중심제로 지난 4월29일 입찰공고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추정가액 733억4437만2000원)의 배치기술자 심사와 관련해 다수 건설사들이 조경분야 경력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공종 경력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이 현장대리인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 입찰을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한상준기자